

OECD국가들의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현황과 제안

이 글¹⁾에서는 OECD 국가들의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현황을 살펴보고, OECD가 제안한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을 위한 4가지 정책제언과 선행조건 등을 제시하였다.

가. OECD 국가들의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현황

■ OECD 국가들의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현황

- OECD국가들은 유아교육과 보육 행정체제에 따라 일원화 체제(통합체제, 연령별 통합 체제)와 이원화체제(병행중복체제)로 구분될 수 있음.
- 단일부처로 통합하는 경우, 지식기반사회의 경쟁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교육부로 통합 하는 국가가 복지 분야 부처로 통합하는 국가보다 많음.

〈표 1〉 OECD 국가들의 유아교육과 보육 행정체제

구분		국가명	담당부처	담당 연령 (세)
일원화체제	통합체제 (Integrated system)	스웨덴, 뉴질랜드, 스페인,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교육부 보건복지부	0~6
	연령별 통합체제 (Split system)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태리	교육부 보건복지부 (영국의 경우, 노동부)	3~5(6) 0~2(3)
이원화체제	병행중복체제 (Dual parallel system)	일본, 한국	교육부 보건복지부	3-5 0~5
		미국*	교육부 교육부 & 보건복지부	5 0~4

주: * 주에 따라 차이가 있음.

1) 이 글은 육아정책개발센터가 2006년도에 수행한 육아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유아교육·보육의 협력과 통합 방안(이옥·김은설·신나리·최혜선·문무경, 2006, 발간중)의 일부임.

나. 유아교육 · 보육 통합을 위한 OECD의 4가지 정책 제안

[유아교육 · 보육 통합을 위한 4가지 정책 제안]²⁾

- ▷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간의 조율된 정책적 기구 구성
- ▷ 다른 부처 및 부서와 협력하여 일할 수 있는 단일주관부처 결정
- ▷ 개혁을 위한 협력적이고 참여적인 접근
- ▷ 각 지역사회 내 서비스 제공자, 전문가, 부모간의 연계 강화

■ 정부차원에서 조정된 정책 기구를 구성하여야 함

-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을 위한 협력적, 체계적 정책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범 부처간, 부서간 조정기구 구성
 - 캐나다, 덴마크, 영국의 경우, 조정기구를 구성하여, 아동을 위한 핵심적 전략을 개발함. 즉, 내각 수준의 아동위원회(Children's Committee)를 구성하여 모든 영유아를 아우르는 전략을 개발하며, 위원회 의장직을 재무부장관이 맡았음.
- 이러한 조정기구는 구체적인 목적(예: 특정과제 조정 또는 특정대상 집단에 초점을 맞추고자 함)을 위하여 설치된 경우에 매우 효과적임³⁾.
- 관할부처 간의 다른 풍토와 목표가 유아교육과 보육의 정책 통합을 제약함(예: 한국, 아일랜드)
- 조정기구의 유아교육과 보육정책의 공통되고, 광범위하며 실제적인 비전 제시가 필수적이며, 담당부처의 비전 실천 의지가 중요함.
 - 관련부처, 지방 당국, 부모들이 함께 동의할 수 있는 비전이여야 함.
 - 담당부처는 각 부처의 과거 역사를 민감하게 고려하고, 특정분야와 협력하면서 여러 부문의 관심사를 포괄할 수 있어야 함.
-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위하여 최근 OECD국가들은 조정기구를 통한 개혁안을 실행하고 있음.

2) OECD(2001), Starting Strong: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3) Choi, S. (2003),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reform in the republic of Korea: part 1- "Early childhood school", UNESCO Policy Brief on Early Childhood.

■ 단일 주관 부처(lead ministry)로 통합하여야 함

- 전 세계적으로 영유아기 서비스를 단일부처로 통합하는 추세임.
 - 북유럽 국가들,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스페인, 영국 등
- 단일주관 부처로는 교육부가 강한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음.
 - 사회부, 이동가족부, 복지부, 양성평등관련 등 여러 관련부처가 각기 단일부처로서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으나, 교육부는 유아발달과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여타의 부처보다 더 강력한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음.

■ 협력적이고 참여적인 접근법을 채택하여야 함

- 유아교육과 보육 관련 정책의제 형성과 실행과정에 정부, 기업, 시민단체, 지역사회 단체들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도록 함.
- 참여적 접근은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광범위한 공적 지원을 보장하고, 다양한 관점을 통합하여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함.
- 특히 부모를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의 중요한 파트너로 여길 필요가 있음(예: 핀란드 사례).

■ 지역사회 내에서의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 전문가, 부모간의 연계를 강화하여야 함

- 영유아교육기관과 가족 그리고 영유아서비스(학교, 보건, 특별교육)의 다양한 형태의 협력은 아동과 부모에게 일관성을 제공함.
- 서비스 공급자의 상이한 전문성 훈련 및 배경, 규정, 재정, 노동인구 전달체계, 서비스 목적에 대한 다양한 비전 등은 협력적 접근법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일부 국가에서는 유아서비스, 전문가들, 부모들이 협력하고자 노력해 온 반면, 일부 국가에서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불과함.

다. OECD 국가들의 부처 통합 요건

[OECD 국가들의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위한 4가지 선행조건]⁴⁾

- ▷ 수년간의 통합찬성에 대한 여론의 축적
- ▷ 장관 또는 정부부처들의 리더십과 더불어 유아교육 관련 부처의 정치적 헌신
- ▷ 상대방 관료집단 또는 전문가 이익집단들의 극심한 반대 부재
- ▷ 체제전반에 걸친 행정적 역량 및 전문가 역량 강화

■ 통합을 위한 전문가 역량 강화 요인(Building expert capacity)⁵⁾

- 중앙 정부의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담당 부서 전문성 강화
 - 통합을 위한 초기단계 노력으로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정책전문가, 유아교육 및 보육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하여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통되는 서비스 전달체계, 요구 사항, 규정, 시설인증, 교사양성 및 현직훈련의 통합을 위한 체계적 접근을 도모함(예: 스웨덴, 미국 조지아주와 매사추세츠주).
- 서비스 운영관리의 지자체 위임으로 지자체 전문성과 리더십 강화
 - 유아교육과 보육 업무의 지자체 위임은 가정과 지역사회의 권리 존중뿐 아니라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함. 즉,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가 존재할수록 지자체가 관리하지 않는 경우, 중앙정부의 관리가 어려워짐.
 - 지자체로 위임할 경우, 민주주의의 문제, 아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책임, 부모의 권리, 참여와 소유권의 문제들이 이슈가 될 수 있음.
- 대학, 연구기관, 관련단체 등에서의 전문성 강화
 - 담당 부처와 정부 출연연구기관내에서 전문가들의 연구능력 향상과 독자적인 전문성 개발이 유아교육과 보육 체제 발전의 필수조건임.

4) Cohen, B., Moss, P., & Wallace, J. P. (2004). *A new deal for children? Reforming education and care in England, Scotland and Sweden*. London, England: Policy Press.

5) OECD(2006), *Starting Strong II,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